'하늘 아래 첫 동네' 인 지리산 심원마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매년 피서철 모여드는 관광객들로 노고단에서 발원한 '심원계곡'을 오염시킨다며 마을을 이주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민박집·식당 환경오염…야생 동·식물 '신음'

국립공원 40년

〈2부〉지리산의 오늘과 내일

❹ 자연마을·사유지 정비

공원 계곡 깊숙한 곳까지 상가 난립
"자연 훼손의 주범" 이주 적극 추진
年 7천만원 소득…주민들 반발 과제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는 자연마을이 많다. 대대로 화전(火田)을 하며 생활해오는 마을들이다. 따라서 사유지도 많은 편이다.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현재 23개 마을 420가구에 1천15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사유지는 공원 전체 면적 471.758㎢ 중 23%가량인 108㎢로 추정된다.

그러다 보니 지리산 국립공원 깊숙한 곳까지 음식점 등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공공 자산인 관광지가 주변 상가의 영업장소로 불법 점령되기도 한다.

주민에 의한 차량 통행이 잦고 공원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무질서한 행위가 유발되는 것은 물론 많은 오염원이 발생, 야생 동·식물 피해와 자연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유지와 함께 지리산 내 마을이 지리산 자연훼손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사유지인데 건축 제한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불만이다.

자연보전도 해야 하고 사유재산권도 지켜져야 하다 보니 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원 지정 당시부터 사유지 및 거주민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67년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발족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가 이뤄진 틈을 타 상업 허가가 우후죽순으로 남발되기도 했다.

사유지를 국가가 사들일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에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명시돼 있지만, 애초부터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할 때 주변 토지 평균 가격의 50% 미만 가격에 국가가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대대로 살던 토지를 손해 보며 팔겠다는 주민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005년부터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사유지 정비정책과 주민 이주사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리산 국립공원의 주민 이주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측은 지난해 '하늘 아래 첫 동네'로 잘 알려진 심원(深遠)마을과 직전(稷田)마을에 대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2011년까지 이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현재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심원마을은 19가구 34명이, 직전마을은 31가구 87명이 살고 있다.

공단 측이 이들 마을에 대한 이주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칠선계곡' '문수계곡'과 더불어 지리산 3대 계곡으로 꼽히는 '심원계곡'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계곡 두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1ℓ 당 0.5㎎과 0.6㎎이었지만, 피서철이 끝난 9월에는 1.3㎎으로 상승했다. 1급수의 계곡이 2급수로 떨어진 것이다.

공단 측은 지리산의 핵심보전 지역에 위치해 매년 성수기 등에 계곡 내 물놀이, 야외취사, 식당 등의 영업행위로 각종 위법행위와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이주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주 사업은 관광수입으로 연평균 5천만원~7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민들은 합당한 보상가격을 맞기 전에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도 이곳 심원마을을 '랜드마크(Land Mark)'해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주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자연환경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예전의 심원마을과 직전마을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화전(火田)을 하며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을 영위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민박·식당 등을 운영하는 등 마을 전체가 상업화돼 자연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마을 이주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이주 사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 측은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이며, 전남도와도 이주 사업에 관해 협의중"이라며 이주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이주 방법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